

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

2023. 10.

금 융 위 원 회

I. 감사실시 개요

☐ 법적근거

- 민법 제37조* 및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규칙(총리령) 제9조

*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※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직전 종합감사는 2020.11월에 실시

☐ 감사기간 : 2023.08.30.(수) ~ 09.06.(수), 6일(근무일 기준)

☐ 감사대상 : 고유사업, 예산·회계, 조직·인력, 임직원 복리, 내부통제 등 조직운영 전반

☐ 감사요원 : 감사담당관 외 7명(외부전문가* 1명 포함)

*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선임연구원

☐ 감사중점

-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
- 의사결정기구(총회, 이사회 등)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
-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
- 예산편성·집행, 계약사무의 처리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
- 임·직원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
-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
-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
- 종전 금융위 감사('20년)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① 규제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필요

- 전국은행연합회는 자율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자체 심의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목적으로 「은행권 자율규제 운영규정」(이하 ‘운영규정’이라 함) 제9조에 근거하여 규제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고 함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
- 위원회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 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모범규준 등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
 - 「운영규정」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합회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, 최근 3년간 개최된 총 15회 회의 중 2회(2021-1차 및 3차)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 결과와 관련 자료가 공문으로 송부되지 아니함
- 또한, 위원회는 규제 관련 심의기구로 「운영규정」에서 위원의 구성, 의장의 직무,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, 의사정족수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하여 「은행권 자율규제 운영규정」상 규제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, 심의결과를 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(제도개선)

②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장학프로그램 운영 철저 및 활성화 방안 마련

-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의 역량 개발 기회 제공,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,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(2015.7.1.)하여 장학프로그램*을 운영하고 있음

* 금융감독원-은행연합회-KDI국제정책대학원 스칼라십(FSS-KFB-KDIS Scholarship)

- 동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3명의 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자를 선발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년간의 등록금, 한국에서 체류하는 최초 1년간의 체재비, 왕복항공권 등 제반소요비용을 은행연합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이 7:3으로 부담하고 있으며, 최근 3개년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9명* 대상 28회 244,945,710원임

* 연도별 지원자/선발자 : ('20년) 3명/3명 ('21년) 3명/3명 ('22년) 2명/2명 ('23년) 2명/1명
(※ 최종선발자 2인 중 1인은 입학포기)

- 「아시아 신흥국 은행감독당국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한 금융감독원-은행연합회-KDI국제정책대학원 업무 협약서」 제5조에 따르면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장학생의 매학기 성적표 및 학위 논문 또는 논문을 대체하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
-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장학생의 매학기 성적표를 받아 학업성취도는 확인하고 있으나, 석사학위 취득요건인 논문 또는 논문대체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지 않아 석사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장학생의 논문 또는 논문 대체 보고서 확인 및 석사 학위취득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,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가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장학생과 교류 강화 방안(예, 정기적인 오찬 미팅,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)을 마련 후 실행할 필요 (제도개선)

③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운영 내실화 필요

-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산업에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과 더불어 은행사회공헌협의회(이하 '협의회')를 은행사회공헌협의회규약(이하 '규약')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
- 협의회는 해당 규약에 따라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,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내역은 8회로 파악됨
- 또한 각 사원은행의 분담금이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사업 예산은 '18~'23회계연도 동안 일괄적으로 20억원 책정되었으며,

- 특히 '20, '21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60%대로 저조하였고, '22회계연도에는뱅크잇(Bankit) 플랫폼서비스*를 개시한다고 2022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산상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

* 은행연합회에서 '22.1월부터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고 참여자 간 매칭과 펀딩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사회공헌협의회 규약에 따라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의결사항으로 사회공헌활동 추진의 기본 방향과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회공헌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(제도개선)

④ 지표전담조직 설립 관련 미수금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필요

-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8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'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'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
 - 재무상태표 작성시,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2조(재무상태표 작성기준)에 따라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'유동자산'으로 하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'비유동자산'으로 작성하여야 함
- 전국은행연합회는 지표전담조직 설립 자문용역 관련 컨설팅 비용을 설립 예정 조직을 대신하여 선지급하였으며 신설조직의 설립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,
 - 해당 설립 관련 미수금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, 전국은행연합회는 미수금 전액을 유동자산으로 계상하여 유동자산을 과대 계상함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지표전담조직 설립 자문용역 관련 미수금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 (시정)

⑤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부적절

-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8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'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'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
 - 재무상태표 작성시,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9조(유동부채) 및 제20조(비유동부채)에 따라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'유동부채'로 하고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'비유동부채'로 작성하여야 함
- 전국은행연합회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종료기 예정되어 임대보증금이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나, 임대보증금 전액을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여 유동부채를 과소 계상함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거래 관련 임대보증금을 유동부채로 분류되도록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 (시정)

⑥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비 취득금액의 유·무형자산 미계상

-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은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8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'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'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
 - 재무상태표 작성시,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7조(무형자산)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'무형자산'으로 하고 무형자산에는 '컴퓨터소프트웨어'가 포함됨
 - 또한,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16조(유형자산)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'유형자산'으로 작성하여야 함

- 전국은행연합회는 ‘자택근무용 원격접속 시스템 구축 사업 대금 지급’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비 취득금액을 유·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, 관련 금액을 전액 비용(전산업무비 등)으로 인식하여 비유동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함
- 해당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바, 전국은행연합회는 ‘20~’22년 중 발생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관련 설비 취득금액을 유·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,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기존에 미인식한 유·무형자산을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자산 내역에 포함하여 해당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(시정)

⑦ 전국은행연합회 내규 정보자산관리절차 적용범위 부적절

- 은행연합회 내규 「정보자산관리절차」 제1조(목적)는 ‘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제2조(적용범위)에서 ‘세금우대 업무와 관련하여 IT부서에서 운영하는 장비와 정보자산을 적용범위’로 규정하고 있음
- 이로 인해, 「정보자산관리절차」의 적용 대상이 ‘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’에서 ‘세금우대와 관련하여 IT부서에서 운영하는 장비와 정보자산’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
- 현재 세금우대업무와 관련한 통합IT시스템에는 ‘세금우대저축 한도관리 시스템’ 외에도 세금우대와 관련이 없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계좌 공유 시스템, 예금계좌 개설정보 공유시스템, 대포통장 명의인 공유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「정보자산관리절차」 내규상 정보자산 적용범위가 세금우대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보자산적용범위 관련 문구를 변경할 필요 (제도개선)

⑧ 총회 의사록 관리 및 변경등기 적기 보고 준수

- 「민법」 제76조(총회의 의사록) 및 「은행연합회 정관」 제15조(총회 의사록의 작성, 배포) 제1항에 따르면 총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
 - 은행연합회 총회 의사록 확인 결과, 화상·서면회의 의사록(14건)과 대면회의(2건) 의사록에 비상임이사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
- 또한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(이하 '규칙') 제6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법인이 등기를 하였을 경우 10일 이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
 - 은행연합회는 등기 변경 사유 발생시 「민법」 제52조(변경등기)에 따라 3주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나, '규칙' 제6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건은 최근 1건('23.6.28일 도달)에 불과

⇒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총회 개최시 의장 뿐만 아니라 출석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안내하고 등기변경 사유 발생 시 적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(제도개선)